

# 전국으로 퍼진 버스노사 갈등...“전국 4만대 멈추나”

## 자동차노련 “27일까지 합의 안 되면 28일 전국 동시파업” 서울시, ‘통상임금 확대’ 두고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 나서

서울 시내버스의 임금협상 관련 노사 갈등이 결국 전국 단위로 퍼졌다. 오는 28일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 시내버스 외에도 고속·전세·마을버스 등 전국 4만 대 규모의 버스가 동시에 멈춰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시 및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중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 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지난 8일 전국 대표자 회의 후 “각 지역 노조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기간(15일) 최선을 다해 교섭하기로 했다”며 “27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노련에는 서울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전

국 17개 시·도 22개 지역 버스노조(고속·전세·마을버스 등 포함)가 소속돼 있다.

오는 28일 결국 전국 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13 년만에 전국 버스 노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파업이 될 전망이다. 당시 국회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에 반발한 전국 버스 회사들이 같은해 11월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놓고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고, 노조도 전국단위 버스 노조와 동시 조정을 언급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진행한 뒤 연휴 이후인 7일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그러자 서울시도 같은 날 인천·부산·대전·대구 등 10개 지자체와 공동 대책회의를 여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서울시 버스노조는 “상급단체(자동

차노련)와 지역 버스노조가 참여하는 8일 회의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을 넘어 전국 단위로 투쟁을 확대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선 것이다.

결국 지난 8일 전국 자동차노련은 각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모두 조정신청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이미 조정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은 하지 않지만 타지역의 조정기간 중에도 사측과 서울시에게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진행될 전국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서울시 버스노조는 27일까지 안전운행을 지속하되, 27일 전까지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며 “만약 서울시 및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등으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28일이 도래하

기 전이라도 일부파업 등에 돌입하며 쟁의 행위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측은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버스 운행상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노사 협상과 더불어 일부 버스기사들의 고의 지연 운행 등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노조의 준법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 대응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첨단 장비를 활용한 'K-스마트 순찰' 시범운영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K-스마트 순찰' 시범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등 대원들이 웨어러블 로보트를 착용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특별범죄예방활동강화기간'의 일환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의도권 일대에 드론·웨어러블 로보트·전자자전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K-스마트 순찰'을 시범 운영한다.

## ‘이재명 파기환송’ 법원 내부 여파 계속...법관대표들 논의 결론 주목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법관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 전망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된다.

이번 임시회의에 다룰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초고소 판결로 촉발된 대선 개입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시회의 7일 전까지 구성원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되며,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 논의가 나온 배경이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이 초고소로 판결한 것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개입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관들도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법관들이 사법부 신뢰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낼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관들이 나서 이 후보 사건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이번 임시회의 소집 과정에서 법관 대표의 상당수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국회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와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청문회 이후 이어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에 따라 법관들이 사법부 권한 침해와 재판 독립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회의 결과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올 것이라 예상도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관들이 민감한 시기에 날 선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회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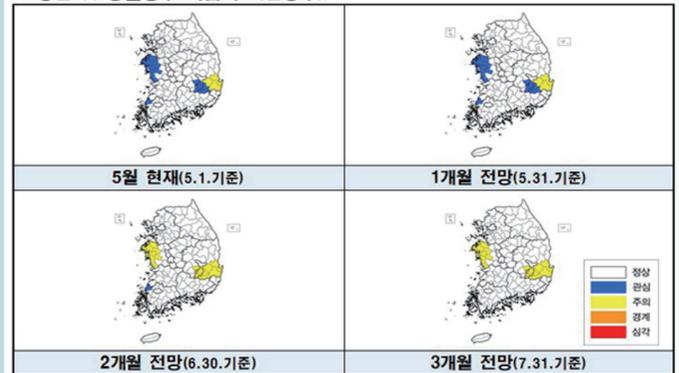
법원 내부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일 회의에선 격론이 예상된다. 여러 안건이 올라 오더라도 부결돼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가 길어질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장시간 회의가 지속돼 시간이 부족한 경우 안건 추가 검토를 위한 요청이 있으면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선욱 기자

## 영동·경상·전남에 가뭄...정부 “이달 강수량, 평년과 비슷할 듯”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영동·경상·전남에서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달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79.2%(219.9mm)로, 강원 영동, 경상도, 전라남도도 중심으로 기상이

뒀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가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거나 없는 등 기상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가뭄을 말한다.

5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6월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평년과 비슷한 범위는 5월 79.3mm~125.5mm 6월 101.6mm~174mm, 7월 245.9mm~308.2mm다.

김희면 기자

## “개 피하려다...” 사상 사고 낸 화물차 기사, 면허취소 소송 패소

도로 위에 뛰쳐나온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상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화물차 기사 A씨의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차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충남 한 평도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택시를 충돌했다. A씨는 갑작스럽게 전방에 나타난 개를 뒤늦게 발견, 조향 장치(핸들)를 지나치게 왼쪽으로 돌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택시 기사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상 사고를 낸 점, 중앙선 침범 사실 등을 들어 A씨에게 벌점 총 135점을 부과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연간 누적 벌점 121점)을 넘기면서 전남경찰청은 A씨의 1종 대형·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자 A씨는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스스로도 모르게 핸들을 조작하다 난 사고다. 교차로 신호 위반 1차제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벌점이 부과된 점, 생명을 위협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